

【 해외금융뉴스: 미국 】

IMF, 재정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요구

- IMF 수석경제학자인 올리비에 블랑차드는 세계경제의 경기침체가 길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가 동참하는 대대적이면서도 주도면밀한 경기부양 대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계 GDP의 2%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며, 재정지출 승수가 1이라고 가정할 때 그 효과는 2% 이상이 증가하게 될 것임.
 - 세계 각국의 정부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금리가 최대한 낮아져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의 중심이 되고 있음.
- 블랑차드는美차기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바람직스럽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지출의 규모는 IMF가 적정수준이라고 분석한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영국의 부가가치세 감세는 그 인하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지출을 증대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언급함.
 - 美차기행정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 규모는 미국 GDP의 6%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기 투자지출도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바람직스럽다고 평가함.
 - 그러나 비차별적 감세와 자동차산업과 같은 문제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등의 재정확대 정책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않으며, 정부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뿐이라고 경고함.
 - 비차별적 감세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감세를 통해 소득이 생길 경우 지출보다는 저축하기 쉽고 이러한 경우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에 감세는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을 목표로 하고 이들의 지출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실시는 인기 영합적인 측면은 있으나 공정무역거래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각국의 동일산업 보호무역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함.

(Financial Times, 12/29)